

옛 전남도청 복원, 5·18 시민군 활동 거점 오롯이 살린다

복원추진단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방안 공개...2025년 9월 완공 목표 시민군·계엄군 총기 등 무기 실물 전시하고 회의실 지하 무기고도 복원 지나친 사실적 묘사로 왜곡 악용 우려 속 문화예술 콘텐츠 빈약 지적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활동 거점인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이 항쟁 당시의 모습을 오롯이 담아 복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복원추진단)은 20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원사업 전시설계와 제작·설치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9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설명회 이후 구체적인 전시 콘텐츠 구성안이 발표됐다.

도청 회의실 지하에 시민군 무기고를 복원하고 시민군이 자체 회수한 총기뿐 아니라 TNT, 다이너마이트 등 폭약까지 모형으로 전시하기로 했다.

도청 본관 3층에는 시민군과 계엄군이 사용한 총기, 최루탄 등 무기 실물을 전시하고, 시민군이 쓴 '펼기문'을 통해 시민군이 총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계엄군과 시민군 간 무기 제원의 차이를 보여주고 시민군의 열악한 실태를 보여주겠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철거된 상무관 내부 2층 관중석과 아스팔트 바닥, 재건축으로 원형을 잃은 수위실 등은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한다.

도경찰국 본관으로 사용됐던 1층에서는 5·18의 역사적 맥락을 돌아보기 위해 10·26 사건, 12·12 군사반란 등 5·18 이전 역사를 패널로 전시할 방침이다. 다만 5·18 가해자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복원추진단은 전했다.

해직 언론인들이 요구한 도청 별관 언론검열관실 복원 여부는 다음달 초에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 복원추진단이 확보한 언론검열관실 관련 사진 등 증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도청 본관 2층 내부국장·새마을상황실에서 국내외 언론 보도 자료를 비교 전시하면서 언론검열 과정도 소개하기로 하고, 도청 별관의 언론검열관실 공간은 비워 두기로 했다. 추후 광주전남언론인협회에서 제시할 사진 등 자료를 토대로 복원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콘텐츠가 지나치게 사실적인 묘사에 치중하면 자칫 5·18 왜곡과 폄훼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청 회의실 지하 폭발물 전시, 도청 본관 총기 전시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군들이 화기로 무장을



옛전남도청 본관 3층 상황실에 들어설 예정인 시민군 무장 항쟁 관련 전시관 투시도(왼쪽)와 2층 복도에 들어설 예정인 시민군대회 관련 전시 투시도.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제공>

하고도 자체적으로 질서와 치안 유지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지만, 한편으로 시민군의 무장을 직접적으로 보여줘 5·18 왜곡·폄훼 세력이 '5·18 무장폭동설'을 악의적으로 부각하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전시하는데만 치중해 5·18 정신을 미래 세대로 전수하는 매체 역할을 할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설계는 빈약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콘텐츠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원추진단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한 것은 도청 회의실 1층 열린 도서관, 2층 강당뿐이다. 강당은 접이식 의자를 설치해 토론 등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수준으로만 복원하기로 계획이 짜였다.

임해정 극단 토박이 대표는 "단순히 사건 이해를 돕는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어 5·18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창작과 문화·예술, 공연 등을 위한 전용 공간도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최근 한강 작가가 글로써 광주 정신을

전한 것과 같은 이치다. 옛 전남도청이라는 장소에 깃든 광주 정신을 예술의 힘으로 끌어올려 관람객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화·예술 공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원추진단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복원 공사를 하고 있다. 내년 10월까지 전시물 설치를 마치고 12월 개관할 예정이다.

20일 현재 건설공사 공정률은 현재 34%, 전시콘텐츠 설계 용역 공정률은 10%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기념재단, 5·18 왜곡 혐의 이영일 전 의원 고발

인터넷 매체에 북한군 개입설 옹호 '북한공산계열의 공작 산물' 기고

5·18기념재단이 이영일(85) 전 국회의원을 5·18민주화운동 왜곡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20일 이 전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전 의원이 지난 5월 26일 인터넷 신문매체인 '뉴데일리'에 '5·18 북한특수군 개입

설'을 옹호하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칼럼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광주에서와 같은 내란형 폭동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무기가 털리고 미전향간첩수용시설인 광주교도소가 여러 차례 파괴될 공격 앞에 노정됐고 공장에 있는 군용장갑차들을 탈취, 몰고나와 시민 저항수단으로 삼는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북한공산계열의 공작산물'로 보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의원은 전두환씨가 민주정의당 총재였던 1985~1986년 총재 비서실장을 지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법원, 국정원 등을 통해 허위성이 확인된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반복 주장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만들고 있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5·18 왜곡과 폄훼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5·18왜곡방지법 등에 반영된 사회적 합의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 살고 있던 아내와 모친 다투자 자기 집 불지르려던 남편 집유 선고

고부간 갈등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 50분께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아내와 모

친이 다투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인화물질을 거실에 뿌리고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집에서 당장 나가라. 불을 질러야 나갈거냐'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BTS굿즈 판매 사기 하이브 전직 팀장 징역형

사업 투자 속여 5억여원 가로채 방탄소년단(BTS)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전직 팀장의 지위를 내세워 기념품 사업 투자금을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주식회사 하이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하이브 본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BTS 멤버들의 굿즈(기념품)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BTS 멤버가 군대를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고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가 굿즈 제작업체에 선금을 보내주면 제작업체에서 물건을 생산해 회사에 공급하고 회사가 제작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제작업체에서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굿즈 사업은 실체가 없고 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A씨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A씨가 피해자에게 6억 13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초등생 숨지게 한 폐기물 수거차량 운전자 구속

광주북부경찰, 사고 20여일만에 광주시 북구의 아파트에서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초등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차량 운전자가 사고 발생 20여일만에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운전자 A(49)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

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을 몰다 초등생 B(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해 조사중이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